

정책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한 BRM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RM Classification System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

노 영 희 (Younghee Noh)**

박 양 하 (Yang-Ha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5. BRM에 대한 실무자 면담결과 |
| 2. 이론적 배경 | 6.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 3. 연구설계 및 절차 | 7. 경험적 검증을 통한 최종 확정 |
| 4.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의 적합성논의를 위한 사례조사 | 8. 결 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RM분류체계분석, 문헌분석, 정책정보제공사이트 분류체계분석, 분류전문가논의과정, 정책정보수요자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정책정보자료의 실제적 구축을 통한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BRM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정보관련 정보자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정보서비스에 적절한 BRM 분류 단계를 3단계로 확정하였다. 국내의 정책정보제공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분류체계와 서비스 조사를 통해 BRM 분류체계가 정책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무자 면담 조사를 통해 BRM의 적절성 확인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BRM 분류체계 사용의 적절성과 BRM 주제분야별 보완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BRM 분류 체계의 주제 내용을 확정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classification system adapted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leted the following processes: BRM taxonomy analysis, document analysis, analysis of classification systems providing policy information, consulting classification experts, surveys and interviews with policy information consumers, and an empirical validation process through the actual construction of policy information materials. Finally, this study complemented and modified the BRM taxonomy system and proposed a classification system appropriate to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Through the procedures of experts discussion, the steps of BRM analysis appropriate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is determined as three steps. The domestic institute websites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s has confirm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BRM taxonom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system and service research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Also through the specialist interview, the confirmation of BRM and the improvement has been drawn.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study analyzes the appropriateness of available BRM taxonomy system and the requirements by subjects. And through the empirical verification, it determines the subject of BRM taxonomy system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s.

키워드: 정책정보서비스, BRM 분류체계, 정책정보자료

Policy Information Service, BRM Taxonomy System,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adelante@kk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1월 2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35-171, 2014. [http://dx.doi.org/10.4275/KSLJIS.2014.48.4.135]

1. 서론

정책은 미래지향적 행동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정책과 상호작용성이 있는 환경, 체제,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책정보라 할 수 있다.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정책에 대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정책 전 과정의 결과물인 산출물 중심의 정책자료를 정책정보로 한정할 수 있다(홍현진, 노영희 2007).

정책결정자는 정책개발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정보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정보제공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책정보제공시스템 산재와 제공자료의 중복문제, 정책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의 부족문제, 검색의 단순성, 부가 정보와 개인 맞춤형 기능과 같은 고도화된 정보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정보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정보를 정책정보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브라우징하고 하고 원하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정보자료의 분류체계로 이미 도서관 분류체계가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매우 잘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분류체계가 웹문서의 분류

에는 적합하지 않고, 실제도 국내외의 정책정보제공사이트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도서관분류체계를 따르기보다는 정책정보제공사이트마다 완전히 다른 분류체계를 가지고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정보로 특성화된 도서관으로서 국가도서관의 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책정보관련 인터넷정보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도서관 분류체계를 따를 것인지, 정부기능 및 업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여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BRM 분류체계를 따를 것인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다. 도서관 분류체계의 완전성과 호환성을 인정은 하지만 업무기반 BRM 분류체계의 경우 정책정보이용자들에게 매우 친숙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정보자원을 제공하기도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기능기반의 BRM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정보나 기록정보 관련 분류체계에 대해서 논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실제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분류체계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진과 분류전문가와의 과정을 거쳐 분류체계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실제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는 정책정보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책정보관련 인터넷 정보자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BRM의 개념 및 목적

2.1.1 BRM의 개념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은 EA(Enterprise Architecture) 참조모델 중의 하나이다. EA는 실제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의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가시화하여 조직 자원을 전사적인 범위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표현하고,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원칙, 지침, 업무, 기술 등을 표준화하며,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정형화(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지원한다(신신애 2005).

EA에서 표준화를 위한 표준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참조모델(RM: Reference Model)이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조모델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이다. 참조모델은 5개의 참조모델, 즉 성과참조모델(PRM: Performance RM), 업무참조모델(BRM: Business RM), 서비스(응용) 참조모델(SRM: Service RM), 데이터참조모델(DRM: Data RM), 기술참조모델(TRM: Technical RM)로 구성되며,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각각의 안이 제시되었다(정보통신부 2006).

5개의 참조모델 중 ‘BRM이란 업무 아키텍처의 기준이 되며, 아키텍처 대상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 등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신신애 2005). 정부 BRM

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를 기능별로 3레벨로 분류하여 레벨별 분류, 부처별 분류의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양순애 2007).

2008년에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배포되었는데,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분류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정보관리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며,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인 변화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행정안전부 2008).

2.1.2 BRM의 목적 및 적용범위

BRM은 정부기능을 범정부적으로 연계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단절적이고 수직적인 부처 중심의 정부기능 수행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설문원 2013).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 정보공유를 통한 전 부처 간 수평적 협력체계 기반 마련, 둘째, 행정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 기반 마련, 셋째, 지속적인 업무처리 효율화 기반 마련, 넷째, 효율적인 관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업무 및 수행과정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이음새 없는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유관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업무기능에 따른 다각적 정보제공 등이 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08).

BRM의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국무총리직속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이며, 업무의 기능분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08).

2.1.3 기능분류의 원칙

기능분류의 대상이 되는 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되는데, 기능별 분류체계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 수준에 따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로 분류한다.

또한 목적별 분류체계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의 각 기관별 과제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분류체계이며, 이는 행정기관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준에 따라 비전·정책목표·이행과제·관리과제로 분류된다.

〈그림 1〉은 기능별 및 목적별 기능분류와 관련된 단위 과제와의 연계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중 정책분야는 대국민서비스와 행정기관

내 활동을 분류한 것이며, 예산배분 형평성, 정부조직 설치현황, 국가간 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책영역은 정책분야 내 조직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분야와 각 부처 대기능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대·중·소 기능에서 대기능은 각 부처의 실·국 수준의 업무수행 기능과 예산체계의 프로그램 수준의 기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중기능은 소기능의 내용을 포괄하는 각 부처의 팀·과 수준에서 정의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소기능은 법률, 직제 등 법적인 근거 및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통해서 정의된 기능을 말하며,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상의 단위사무를 주체-객체-활동으로 세분하고 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끼리 선정한다.

2.1.4 분류체계 변경절차

행정업무의 추가, 변동, 폐지 등에 따라 기능분류시스템상의 분류체계 내용을 추가, 수정,



〈그림 1〉 기능분류체계도

삭제할 수 있으며,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의 변경절차와 소기능 및 단위과제의 변경절차는 차이가 있다.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의 변경을 위해서는 기관기능분류담당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앙기능분류담당자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중앙기능분류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한다. 소기능 및 단위과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서기능분류담당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관기능분류담당자에게 변경요청을 한다. 요청을 받은 기관기능분류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한다. 단위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과제 관련정보의 필수항목(조직·인사정보, 속성정보 등)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중앙기능분류담당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필요 없는 경우 단위과제를 수정할 수 있다.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기능이 추가, 수정, 폐지된 경우에 업무담당자는 이를 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분류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 간 연관도가 높은 관련 행정기관의 기관기능분류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선행연구

정책정보의 분류체계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그 다지 많지는 않다. 따라서 기록물 분류와 관련된 연구도 정책정보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그와 관련된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양순애(2007)는 논문에서 첫째,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EA(Enterprise Architecture)와 BRM(Business Reference Model) 등 관련

개념을 살펴보았고,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관관계를 정부기능분류체계(BRM)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와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BRM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단계를 분석하였으며, 넷째, 전자정부사업 분석과 전자정부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차세대 전자정부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설문원(2013)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단위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원의 연구에 나타나 있듯이 분류체계 관련 연구는 사례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능분류의 관점에서 현행 분류체계를 평가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 기능분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적용에서는 혼합적인 분류체계를 제안(이영숙 1997; 최관식 2006; 이현정 2010; 박용부, 김태수 2011)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이명희(2013)는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

을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및 착형 맞춤형서비스의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협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전문센터 모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정부기관의 업무와 정부기능분류체계인 BRM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실현의 기본 구조로 BRM을 제안하고 있다(양순애 2007). 둘째, 기록물분류체계로 BRM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최관식 2006; 이현정 2010; 박용부, 김태수 2011; 설문원 2013). 그러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BRM 분류체계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나 정책연구자들의 의견, 문헌분류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로 정책정보자료 수집을 통한 경험적 검증으로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연구설계 및 절차

3.1 BRM 구조 및 BRM 수정절차

정부기능에 기반한 정책분류체계인 BRM의

구조는 최상위 분류인 17개 정책분야, 2단계 분류에 해당하는 76개 정책영역, 그리고 그 하위로 524개의 대기능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소관부처가 있으며, 소관부처는 대기능별로 구분된다.

BRM은 업무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류체계로서 정부기관의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정보자료도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따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각각의 대기능별로 소관부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정보요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우선 분류체계로 접근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가 정책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논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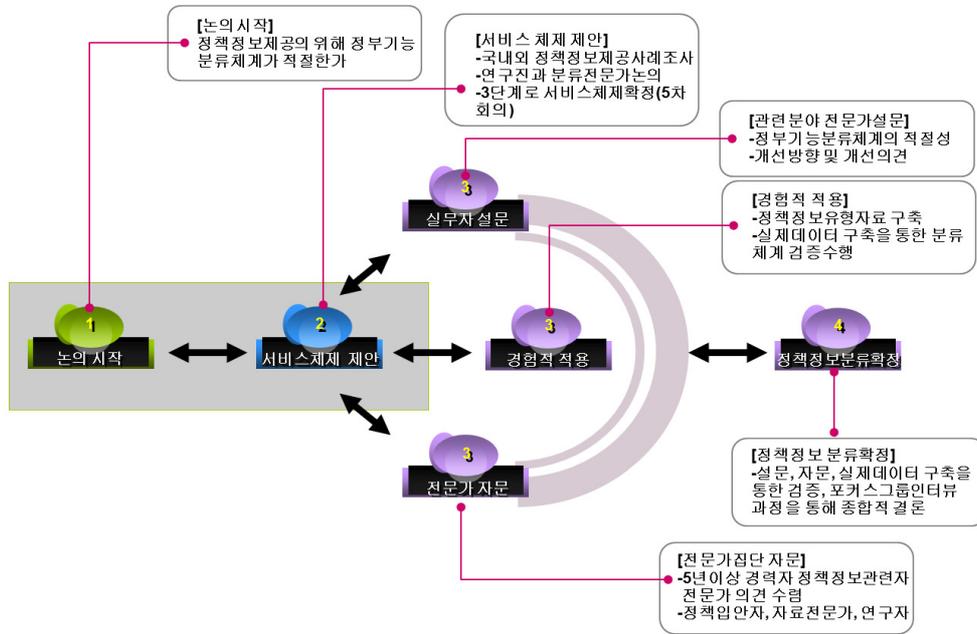
첫째, 도서관의 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과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서비스한다면 1단계~4단계 분류 중 몇 단계까지로 할 것인가?

셋째,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은 어떤 주제분류를 따르고 있고, 몇 단계까지로 하고 있는가?

넷째, 실제로 정책정보자료를 수집해 보았을 때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는 충분히 수집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논의의 내용은 연구진, 분류전문가, 정책입안자, 정책관련 연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제 데이터 구축과정을 통한 경험적 방법, 설문조사 방법, 전문수요자 면담 방법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최종적으



〈그림 2〉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 수정보완절차

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책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제안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정책정보제공사례조사 및 분류체계 조사 후 정책정보서비스에 적합한 3단계의 분류체계 초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5년 이상의 정책정보관련자, 정책입안자, 자료전문가,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설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정보분류체계의 적절성, 개선방향 및 개선의견을 기반으로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셋째, 실제 개발된 분류체계에 각 주제분야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료의 분포 수집가능성을 검증하였다.

3.2 3단계 서비스체제로 정책정보서비스 잠정적 확정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정보제공사례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연구진 논의와 분류전문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표 1〉과 같다.

처음에 연구진이 BRM 분류체계를 2단계까지 제안한 이유는 웹상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깊이를 너무 많이 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분류체계의 개선에는 분류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으며, 분류전문가는 문헌정보분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몇몇 전문가는 정책정보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

〈표 1〉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변경절차

단계	논의 및 결정내용
연구진 논의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그대로 적용하고 가이드 구축, 기준을 2단계까지로 하기로 함
↓	
분류전문가들과의 면담	- BRM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성 문제가 있음 - 수정보완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 논의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그대로 적용하되 -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BRM의 분류체계를 점차 수정해 가도록 결정
↓	
분류전문가팀과의 논의	- 3단계 적용을 검토 요청 - 국내외 다른 사례들을 참고할 것을 요청
↓	
연구진 논의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수정보완 - 가이드 구축 기준을 3단계 분류체계까지 확장하기로 함 - 이후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BRM의 분류체계를 점차 수정해 가도록 결정

기능분류체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연구진은 기존의 BRM 분류체계에 대하여 유사주제분야의 통폐합을 제안하고 분류전문가와의 면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진이 유사주제 통폐합을 제안했던 이유는 BRM 분류가 주관부서 단위로 되어 있어서 유사한 내용이 각기 다른 분류체계 하에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에는 더 적절한 상위 분류체계 내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BRM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적용하고 수집된 정보자료를 기반으로 이에 추가·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4.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의 적합성논의를 위한 사례조사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류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주제분야로 전문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류체계 적합성의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분류체계들을 집중으로 조사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따르는 기관으로는 정책정보로 전문화된 기관이나 기록관 등이 대표적인데,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을 분석하였고, 해외의 경우 미국의 GPO, 캐나다의 GCP, 영국의 GOV.UK를 분석하였다.

4.1 국가기록원 정책정보 및 국가기록물 제공 분류체계

국가기록원에서는 정책정보 제공방식으로 정부기능분류검색과 국정분야별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두 분류체계 모두 원래의 BRM 분류체계를 따르지 않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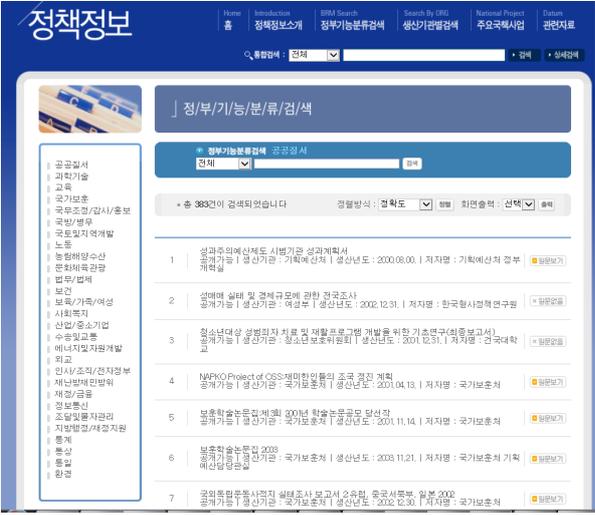
또한 정부기능분류검색에서는 1단계까지만 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정분야별 검색에서는

3단계까지 확장하여 제공하고 있고,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능분류검색의 경우 1단계까지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양이 매우 적고 자료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으며, 자료가 보고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정분야별 검색서비스의 경우에 정책전반의 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기록분야의 자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

<표 2> 국가기록원 정책정보서비스(BRM기준)

주제구분	건수	관련이미지
공공질서	338	
과학기술	9	
교육	6	
국가보훈	3	
국무조정/감사/홍보	1,241	
국방/병무	59	
국토 및 지역개발	3	
노동	496	
농림해양수산	42	
문화체육관광	36	
법무/법제	225	
보건	40	
보육/가족/여성	113	
사회복지	17	
산업/중소기업	1	
수송및교통	236	
에너지및자원개발	34	
외교	1,365	
인사/조직/전자정부	135	
재난방재민방위	464	
재정/금융	7	
정보통신	25	
조달 및 물자관리	4	
지방행정/재정지원	228	
통계	206	
통상	245	
통일	318	
환경	120	
총	6,016	

<그림 3> 국가기록원의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정책정보제공

<http://theme.archives.go.kr/next/publication/formBRMSearch.do?typeId=000010&flag=T>

와 같이 국가기록원 정책정보서비스(BRM기준)를 28개의 주제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고 국내자료 중심으로 조사일 기준(2014년 5월 3일) 총 6,016건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소개는 매우 간단한 서지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단행본이나 보고서 등이 소개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또한 3단계까지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주제분야를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의 분류도 BRM을 기준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단계와 3단계는 BRM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 소개되는 자료의 내용은 근거, 배경, 내용, 참고자료, 집필자, 최초 주제 집필일, 최종 주제 수정일, 관련 주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자료의 경우 거의 3건 이내의 단행본 중심

으로 소개되고 있다.

4.2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디브리리의 테마정보라는 하부주제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정보는 크게 정책자료, 테마기획, 정책정보원으로 구분되고 2단계의 경우 12개로 구분되며, 3단계의 경우 총 17개로 구분된다. 제공되는 정책정보의 건수는 조사일(2014년 5월 3일) 기준으로 71,837건으로 상당히 많은 정책정보 자료가 다양한 각도에서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는 자료는 해외자료이며, 여러 나라의 규정자료, 법령자료, 각종 보고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디브리리)

1단계	2단계	3단계	건수
정책자료	최신정책자료	국내자료	29,061
		해외자료	40,046
		이슈	263
	정부간행물 추천자료		318
테마기획	해외기록으로 보는 한국	해외수집기록물	125
		문서해제	68
	동북아 이야기	한 눈으로 보는 동북아	400
		책으로 보는 동북아	45
정책정보원	국내정부정보원	국내정보조직(부처, 처, 위원회, 기타)	627
		기관명	
	외국정부정보원	외국정부기관	87
		외국정부간행물	5
	국제기구정보원	주제분류	258
		국제기구명	
	국제회의정보원	주제분류	68
국제회의명			
	정책정보 검색노하우		23

1단계	2단계	3단계	건수
정책정보원	정책용어사전		162
	정책정보길라잡이		181
	정부기관자료실 소개	정부조직순	100
가나다순			
알림마당			
총			71,837

http://policy.dibrary.net

4.3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입법지식서비스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주요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주요정책정보, 국회의원정책자료DB, 참고데이터DB, 팩트북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조사일(2014년 5월 4일) 기준 총 229,873건이 구축되어 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료의 전문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정책연구자 및 입안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4.4 GPO

미정부간행물인쇄국인 'GPO(Government Printing Office)'는 미국의 정책관련자료를 13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에 따라 5단계 이상까지 나누어 최종적으로 전문을 PDF 또는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전문에 로그인 없이 접근하여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표 5〉 참조).

특히 "Browse All"은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컬렉션 파트에서는 하위 주제로 5단계 이상까지 내려가서 PDF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4.5 GOV.UK

영국의 'GOV.UK' 사이트의 출판물 서비스는 출판물 형태별, 주제별, 부서별, 공식문서의 상태별, 나라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분류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4〉 국회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상위메뉴	건수	특징
최신주요정책정보	2,206	최신의 주요정책관련 보고서, 매뉴얼이 전문과 함께 제공
국회의원정책자료DB	10,128	국회의 각종 정책토론자료가 전문과 함께 제공
참고데이터DB	217,497	이용안내 / 새로운 창(정책자료이외의 자료도 포함)
팩트북	42	국제기구개념소개만
	229,873	

〈표 5〉 'GPO'의 정책정보제공사이트

주제	설명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방규정코드를 50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매년 최신자료 제공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대통령문서컬렉션)	-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매주 또는 매일 백악관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한 대통령문서자료 -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OF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의해 공식 출판된 자료
Congressional Bills	-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의 입법 제안 자료 - 두 원에 의한 법안의 입법 과정(도입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버전의 자료 - 최종적으로 발행된 법률 버전의 원문제공
Congressional Documents	-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하원문서, 상원문서, 상원조약문서 등 국회문서
Congressional Hearings	-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청문회는 의회의 상원/하원/상하원/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회기 - 상정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얻기 위해 대중에게 개방됨 - TEXT와 PDF로 형태로 이용가능
Congressional Record	-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미 의회의 회의록과 토론의 공인기록 - 의회의 회기중에는 매일 출판되는 것이 특징
Congressional Reports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House and Senate Reports: 상정안에 관한 국회 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조사 중인 문제에 대한 결과 포함 - Senate Executive Reports: 비준에 대한 미국 상원에 제출된 미국과 외국 간 조약 또는 개인의 지명에 대한 다양한 상원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외교(국제)관계 위원회의 보고서
Additional Government Publications	- 기존 FDsys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정부간행물을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제공
Economic Indicators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경제자문위원회에 의해 월간으로 제공되는 총생산, 수입, 고용, 생산, 경영활동, 물가, 금전, 신용거래, security markets(증권 시장), 연방 금융 그리고 국제 통계에 관한 경제적 정보관련 자료
Federal Register	-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의해 출판되는 자료 - 규칙, 제안된 규칙 및 연방 기관 및 단체의 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 명령 및 기타 대통령 문서의 공식 일간지
Public and Private Laws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 공공 및 민간 법률은 slip 법률로 알려져 있음. 슬립 법률은 법의 공식 간행물이며 미국의 모든 주 및 연방 법원과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임 - 개인 법률은 개인, 가족, 또는 작은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면 공공 법률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침
United States Code	-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United States Courts Opinions	- 미국연방법전의 내용을 51개의 주제로 나누어 폭넓게 다루고 있음 - 1926년에 처음 발행, 1934년 개정판, 이후 매 6년마다 정기적 개정판 출판
Browse All	- Collection / Congressional Committee / Date / Government 로 구분하여 자료 제공

사이트 주소: <http://www.gpo.gov/fdsys>

〈표 6〉 'GOV.UK'의 정부간행물 사이트 분류구조 및 데이터 구축 건수

구분	설명	건수	
Publication Type	Consultations	All consultations	20
		Closed consultations	20
		Open consultations	0
	Corporate	Corporate reports	83
		FOI releases	182
		Transparency data	17
	Other	Decisions	0
		Forms	147
		International treaties	20
		Maps	0
		Notices	0
		Promotional material	2
	Policy guidance	Correspondence	9
		Guidance	1,357
		Impact assessments	17
		Independent reports	17
		Policy papers	295
	Research and statistics	Research and analysis	95
		Statistics	42
	Topic	Topics	Arts and culture
Borders and immigration			2,303
Business and enterpriser			2,271
Children and young people			1,193
Climate change			1,756
Community and society			1,138
Consumer rights and issues			507
Crime and policing			1,101
Deference and armed force			1,141
Employment			1,516
Energy			1,740
Environment			3,844
Equality, rights and citizenship			918
Europe			182
Financial services			96
Food and farming			806
Foreign affairs			1,281
Further education and skills			799
Government 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5,098
Government spending			554
Higher education	180		

구분	설명	건수	
Topic	Topics	Housing	479
		International aid and development	1,625
		Law and justice system	1,118
		Local government	1,334
		Medical communications	434
		National Health Service	1,262
		National security	589
		Northern Ireland	185
		Pensions and ageing society	378
		Planning and building	973
		Public health	867
		Public safety and emergencies	1,029
		Regulation reform	427
		Rural and countryside	336
		Schools	2,049
		Science and innovation	653
		Scotland	106
		Social care	515
		Sports and leisure	457
		Tax and revenue	778
		Trade and investment	817
		Transport	3,794
		UK economy	2,624
		Wales	93
	Welfare	1,304	
	Wildlife and animal welfare	581	
	Topical Events	Global Summit to E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	2
		NATO Summit Wales 2014	0
		UK Pavilion at Milan Expo 2015	2
		D-Day 70	2
		Budget 2014	68
		Scottish independence referendum	22
		UK Presidency of G8 2013	20
Autumn Statement 2013		29	
First World War Centenary	1		
Department	영국의 모든 부처별로 출판물 제공	49,919	
Official documents status	Command or act papers	6,655	
	Command papers only	2,542	
	Act papers only	4,125	
World locations	전 세계 모든 나라별로 출판물 제시	49,914	

사이트 주소: <https://www.gov.uk/>

4.6 GCP

캐나다의 정부간행물출판국인 'GCP(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에서는 'Publications' 메뉴에서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GCP 분류의 특징은 대주제 아래 세부주제를 두고, 세부주제 아래의 3단계는 연도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7〉 참조).

4.7 정책정보서비스 분석을 통한 분류체계에 대한 결론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의 사이트들의 분류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은 어떤 주제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몇단계까지로 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곳은 국가기록원 이외에는 없었으며 그마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위메뉴를 변

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세부주제의 경우 완전히 다른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먼저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위 분류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정보제공사이트들 중에서는 도서관 분류체계를 따르는 곳은 없었다.

둘째, 정책정보분류체계의 서비스 단계를 분석하였으며, 1단계에서 5단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5단계까지 제공하는 미국 'GPO'의 경우 브라우징 기능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문헌까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GPO'가 제공하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았고, 국내의 경우 국회도서관이 약 23만 건 정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약 8만 건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원문에 접근하는데 있어 로그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미국 'GPO'는 거의 모든 전문에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차이점이 있지만 국립중앙도서

〈표 7〉 GCP의 정책정보사이트 중 'Browse All'의 정보제공메뉴

1단계(대주제)	2단계(세부주제)	3단계(연도구분)
Browse the Weekly and Supplementary Checklists	Weekly Checklist Issues	2013~2014
	Archived Weekly Checklist Issues	1995~2013
	Supplementary Checklist Issues	2013~2014
	Archived Supplementary Checklist Issues	1997~2013
Browse Serial Publications	정부기관에 의해 출판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 목록	
Specialized Catalogues	현재는 없음	
Recently Featured Publications	최근의 출판물을 중심으로 제공	2013~2014

사이트 주소: <http://publications.gc.ca/site/eng/home.html> / <http://publications.gc.ca>

관에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책정보자료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새롭게 구축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시스템은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현재의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수집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BRM에 대한 실무자 면담결과

5.1 면담설계 및 설계내용

5.1.1 면담설계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류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델파이 기법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절성과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전문가 면담과정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된 BRM 분류체계의 적절성

을 구체적으로 검토받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면담내용은 기존의 연구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분류전문가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서비스 담당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5.1.2 면담설계내용

면담은 개별면담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면담자는 현재 정책정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5년 이하의 경력자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정책연구자를 대상으로 전화요청을 하여 면담을 허락한 연구자에 한하여 대면 면담을 시도하였고, 면담은 가능하나 다른 일정으로 바쁜 연구자의 경우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담자로는 현재 정책정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서로 선정하였다. 즉,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동시에 확보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여 분류체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BRM 관련 면담 설계 내용

구분	면담 설계 내용
면담대상	- 국책연구소 연구원
면담장소	- 면담대상 연구원의 소속 연구소 및 전화면담
면담기간	- 2014년 5월 16일 ~ 23일
면담내용	-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절성 - 변경 적용된 분류체계의 적절성 - 면담자가 평상시에 정책업무 및 연구를 위해 주로 참고하는 자료 및 정책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표 9〉 면담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응답자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주제분야
	직장 근무 경력
BRM 개선방향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정책정보제공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도서관 분류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분류체계 적합성의 근거 제시
	정책정보 분류체계의 세분화 필요성과 그 이유
	정책정보 분류체계의 세부주제 추가 필요성과 그 이유
정책정보이용행태	업무나 연구를 수행할 때 정보자료 입수경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
부록(면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붙임 1: 참고정보원
	붙임 2: 정부기능분류체계(BRM)

한편 면담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은 〈표 9〉와 같다. 면담자에 대한 정보과약을 위해 간단히 개인적인 배경을 묻는 문항과 BRM 개선방향을 묻는 문항, 그리고 정책정보이용 행태를 묻는 문항, 그리고 면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참고정보원과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전부 제시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의 구조화된 면담지를 개발하였으며, 2명의 연구원이 분담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5.2 면담분석결과

5.2.1 면담자의 개인적 특성

면담에 응한 응답자는 총 10명으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남녀 비율은 6:4이고 연령대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장 근무경력과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으나, 주제분야가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연구기간의 한계로 다양한 주제분야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5.2.2 BRM 분류체계의 적절성

정부기능을 기준으로 한 BRM을 기반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서관 분류체계(KDC, DDC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자료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첨부하였다. 그 결과 10명의 면담자 중 7명이 정부기능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1〉 참조).

해당 분류체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각각 질문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정부기능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면담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세종도서관의 서비스 목

〈표 10〉 면담자의 특징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	60
	여	4	40
연령	20대	1	10
	30대	6	60
	40대	3	30
	50대	2	20
가장 오랜기간 담당한 업무	정책개발	0	0
	정책분석	1	10
	정책평가	0	0
	현황분석 및 평가	2	20
	통계연구(통계분석)	2	20
	출판, 홍보	0	0
	담당분야 사업운영	2	20
	정책연구	2	20
	정책입안지원	0	0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3	30
기타	1	10	
직장 근무 경력	5년 미만	3	30
	5년 이상 10년 미만	1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	10
	15년 이상 20년 미만	1	10
	20년 이상 25년 미만	3	30
	25년 이상	1	10

〈표 11〉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빈도	비율(%)
정부기능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7	70.00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3	30.00
총	10	100

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정책에 특화된 서비스에는 정부기능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기능분류체계가 도서관 분류체계보다 더 직관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도서분류는 현실적으로 도서 외의 분류에 사용되지 않고, BRM 역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도서관 분류체계보다 정부

정책서비스의 제공에 더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첫째, 기본적으로 도서관 분류체계를 선호하며, 생산되는 방대한 정책정보 및 연구 성과물을 BRM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OECD Themes 등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새로운 분류기준을 원치

〈표 12〉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부기능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분류는 현실적으로 도서 외에 사용하지 않음. BRM 역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도서관 분류보다 낫다고 생각함 • 세종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함 • 새로운 분류체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좀 더 직관적임 • 정부정책에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기능분류체계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또는 각 정부부처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물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성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자원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설정함 •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연간 1기관에 150여종의 보고서, 정기간행물, 세미나 자료 등이 생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데이터를 산출하면 인문사회연구회 소속만 하더라도 28개 기관으로 연간 약 4,200여종임. 이에 따라 누적 건수를 포함하면 자료의 양이 방대해 질 것임 • 또한 연구성과물 이외에도 참고문헌 등의 자료까지를 포함하면 정부기능분류체계(BRM)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선진국 등에서 사용하는 OECD Themes 등을 참조할 것을 권장함 • 새로운 분류기준이 개발되는 것을 원치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JEL)가 적합함 •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등도 있음 •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사용이 바람직함 • 위의 분류체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함

않기 때문에 도서관 분류체계를 선호한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관 분류체계가 정부기능분류체계 모두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 분류체계(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다수의 의견을 기반으로 종합의견을 정리하면, 정책정보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생산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OECD Themes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5.2.3 BRM 분류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불임으로 제시된 BRM 분류체계의 3단계로 정책정보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그리고 세부주제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10명의 면담자 중 9명이 정부기능 분류체계의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13〉 참조).

BRM 분류체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BRM의 세분화에 대해 첫째, 한 면담자는 정보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각 연구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대외경제분야, 산업분야 등으로 모기관이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하위 기관에서 생산된 연구

〈표 13〉 BRM 분류체계 세분화의 필요성

BRM 분류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여부	빈도	비율(%)
예	1	10,00
아니오	9	90,00
총	10	100

〈표 14〉 BRM 분류체계 세분화에 대한 의견

BRM 분류체계의 세분화 찬성자 의견	BRM 분류체계의 세분화 반대자 의견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수 있을 만큼 세분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구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대외경제분야, 산업분야 등으로 모기관이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하위 조직에서 생산한 연구성과물은 어느 정도 주제구분이 되어있음. 이를 기관별로 구성하거나 조직해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100대 국정과제 항목 등도 참조할 수 있겠지만, 여타 참고정보원은 분류 항목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M 분류체계는 적합하지 않음

〈표 15〉 BRM 분류체계에 세부주제 추가의 필요성

BRM 분류체계에 세부주제 추가의 필요성	빈도	비율(%)
예	0	0.00
아니오	10	100.00
총	10	100

결과물은 상당부분 주제구분이 되어있다. 이에 따라 분류체계를 기관별로 조직해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BRM 분류체계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면담자도 있었다.

다음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BRM 분류체계에서 현재 제시된 것보다 정책분야, 정책영역 및 세부주제를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지만, 이미 연구기관이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고 생산된 연구성과물도 주제구분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이를 참고하여 분류체계 세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분야, 정책영역, 그리고 세부주제

를 더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 주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면담 결과 10명의 면담자 중 10명이 정부기능 분류체계에 새로운 주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5〉 참조).

BRM 분류체계에 세부주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주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으나 이미 모든 면담자가 세부주제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없다. 한 면담자만 BRM 분류체계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뿐이다.

5.3 면담분석결과와 시사점

BRM 분류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을 기반으로 정책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생산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OECD Themes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BRM 분류체계의 3단계 수준으로 정책정보브라우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그리고 세부주제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BRM 분류체계에서 정책분야나 정책영역, 세부주제를 현재 제시된 것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지만 만약 세분화 한다면,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이미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생산한 연구성과물도 어느 정도 주제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세분화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BRM 분류체계에 세부주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주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으나 이미 모든 면담자가 세부주제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절과는 없다.

6.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6.1 설문설계 및 방법

6.1.1 설문지 구성

정책관련 연구자들의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과정을 거쳐 총 22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정책정보연구자, 통계전문가, 정책정보분류전문가 등의 검토과정 및 수정보완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책분야 연구자 10명을 대상으로 미리 예비설문을 하여 설문문항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크게 개인적 배경 5개 문항, 정보이용현황 및 활용정도 11개 문항, 정책정보 개선요구사항 6개 문항, BRM 개선요구사항 4개 문항 등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6.1.2 표집방법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정책정보자료를 비교적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들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연구자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국책연구소는 총 52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실제 설문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설문대상자 확보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52개의 국책연구소 목록을 확보하고, 각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설문대상자를 조사하였다.

〈표 16〉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응답자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주제분야
	직장 근무 경력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한 업무
BRM 개선요구사항	BRM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BRM의 정책정보서비스의 적절성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적절한 분류체계
	BRM 분류체계의 장점
	BRM 분류의 보완 방향

둘째, 홈페이지에서 연구소의 주소, 우편번호, 설문지에 응답해 줄 연구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주로 정책정보 관련 부서의 연구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의 표지(Cover Letter)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자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음을 알리는 간단한 문장을 포함하였다. 설문지가 들어 있는 발송용 봉투의 수신자란에는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의 소속기관명과 함께 실명을 기재하여 설문지가 조사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52개의 연구소당 평균 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총 364부의 배포된 설문지 중 115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31.6%), SA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분석을 하였다.

6.2 설문조사 분석결과

설문응답자들에게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가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류체계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즉, BRM을 알고 있는 정도,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서관 분류체계와 BRM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BRM을 분류체계로 선택할 시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BRM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6.2.1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연구원의 통계학적 특징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53:47로 나타났다. 30대 49.6%, 20대 23.5%, 40대 20.9%, 그리고 50대 6.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연구 또는 업무와 가장 관련 있는 주제분야는 과학기술분야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질서 및 안전 8.7%, 농림·수산 7.8% 순이었으며, 연구원의 직장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 17.4%, 15년 이상~20년 미만 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원이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로 업무정책연구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황분석 및 평가 11.3%, 정책 분석 10.4%, 정책개발 7.8% 순이었다.

61.7%로 나타났다. 평균은 3.07로 보통정도이다(〈표 18〉 참조).

6.2.2 BRM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설문응답자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인 BR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았고, 잘 모른다는 비율이 81.8%나 되었다. 평균은 1.81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표 17〉 참조).

6.2.3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RM의 적절성

정책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BRM 분류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BRM 분류체계는 설문지에 붙임자료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17.4%, 그렇지 않다는 10.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6.2.4 BRM과 도서관 분류체계 중 정책정보서비스에 적합성

BRM과 도서관 분류체계 중 정책정보서비스에 적합한 것은 어떤 분류체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BRM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비율이 15.7%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6.2.5 정책정보분류체계로서의 BRM의 장점

정책정보자료서비스 제공시 분류체계로 BRM 선택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두 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첫째, 정부기능기반 분류체계인 BRM이 도

〈표 17〉 BRM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 알고 있다	2	1.7	1.81	0.84
잘 알고 있다	0	0.0		
보통이다.	19	16.5		
잘 모른다	47	40.9		
전혀 모른다	47	40.9		

〈표 18〉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RM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2	1.7	3.07	0.68
그렇다	18	15.7		
보통이다	71	61.7		
적절하지 않다	9	7.8		
매우 적절하지 않다	3	2.6		
미응답	12	10.4		

〈표 19〉 BRM과 도서관 분류체계 중 정책정보서비스에 적합성

구분	빈도	비율(%)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13	11.3
BRM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18	15.7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11	9.6
잘 모르겠다	68	59.1
미응답	5	4.3

서관분류체계나 다른 분류체계보다 익숙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그렇다는 비율은 17.4%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즉, BRM 분류체계가 연구자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은 2.91로 나타났다.

둘째, BRM이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정책정보자료를 찾는 데 다른 분류체계보다 용이한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그렇다가 33.9%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가 7.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4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BRM분류체계가 익숙하거나 잘 알아

서가 아니라 정책정보제공에는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 BRM이 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BRM 분류체계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2.6 BRM으로 정책정보분류시 보완점

BRM으로 정책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한다면,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세분화가 69.6%로 나타났고,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추가가 11.3%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6.2.7 정보정책서비스와 정책정보분류체계의 개선점

마지막으로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표 20〉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RM의 적절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미응답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정부기능기반 분류체계인 BRM이 도서관분류체계나 다른 분류체계보다 익숙하다.	4	3.5	16	13.9	48	41.7	23	20	5	4.3	19	16.5	2.91	0.88
BRM이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정책정보자료를 찾는 데 다른 분류체계보다 용이하다.	13	11.3	26	22.6	47	40.9	6	5.2	3	2.6	20	17.4	3.42	0.92
기타	1	0.9	3	2.6	10	8.7	1	0.9	1	0.9	99	86.1	3.13	0.89

〈표 21〉 BRM으로 정책정보분류시 보완점

구분	빈도	비율(%)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추가	13	11.3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세분화	80	69.6
기타	5	4.3
무응답	17	14.8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가치있는 정책정보자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원문자료까지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색기능 강화, 통합검색기능, 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중심의 정책정보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개발된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면 제공해야 한다(〈표 22〉 참조).

다음으로 정책정보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RM 분류체계가 정책정보서비

스에 대체적으로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분류의 추가가 필요하며, 통일·외교 아래 개발원조(ODA) 추가, 법 정책, 법률정보도 별도로 국내외로 분류하여 연계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분류체계는 브라우징을 위한 것이고 검색기능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표 23〉 참조).

6.3 BRM 분류체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RM 분류체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의 연구주제분야, 직장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정책정보 이용목적, BRM에 대한 사전 인지도 등이다.

〈표 22〉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요구사항

개선요구사항 대구분	요구사항 상세
구축되는 정보원의 양 및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자료에 대한 정확한 원문소개와 실시간 서비스 제공 쓸 만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워드만 잘 정리해서 준비하면 분류와 상관없이 Google처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국내의 자료 정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는 바 없음) 정보정책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관련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정책정보 맞춤형서비스를 갖춘 정책정보서비스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예정임
서비스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를 입수할 때 폐쇄적인 기준관행에 따라 필요,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변경 도서관 사서들의 능력 밖의 일을 기획하여 국회도서관처럼 불필요한 조직만 확대하지 말 것(입법지원 기능 미흡한 상태), 정책정보서비스를 하려면 사서중심조직이 아니라 전문가중심의 도서관이 제공하여야 함
홍보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정보서비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 분기마다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 연구 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23〉 분류체계 개선요구사항

개선요구사항 대구분	요구사항 상세
BRM 분류체계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능에 따라 생산된 국내자료일 경우 BRM이 맞겠지만, 해외자료의 분류와 일관성은 있는지 알 수 없음 • 도서관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도서관분류체계가 적합한지 BRM이 적합한지 다소 확신이 덜 들지만 BRM 분류도 괜찮아 보임 • 분류가 실제 자료의 내용과 맞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음
분류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외교 아래 개발원조(ODA) 추가 • 법 정책, 법률정보도 별도로 국내외로 분류하여 연계되었으면 함 • 각 분야별 일반 혹은 융합적 자료를 의미하는 기타 혹은 일반이라는 새로운 영역 항목 추가 • BRM체계가 비세분화 되어 있어 분류체계로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세부 영역이 필요함
편의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M 이용 등 이용자 사용 환경 편리성 강화 •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내의 기반정보 등이 검색과 활용이 용이하게 했으면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기능만 분류하는 것인데 기존 서비스와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임,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됨

6.3.1 주제분야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 보완요구사항

설문응답자의 주제배경에 따라 정책정보분류체계(BRM) 보완요구사항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주제분야가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에서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제분야로 환경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와 통신 33%, 공공질서 및 안전이 28.57, 산업·통상·중소기업 25%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정보분류체계(BRM)의 보완요구사항에 있어서 주제분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 p값은 0.229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6.3.2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 적절성에 대한 의견

설문응답자의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 경력에 관계없이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BRM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도 분석에서 P값은 0.5494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3.3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 보완요구사항

설문응답자의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 경력에 관계없이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을 세분화 해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분석에서 P값은 0.4078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3.4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 보완요구사항

설문응답자의 담당 업무별 정책정보분류체

〈표 24〉 주제분야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 보완요구사항 비교

구분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세분화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추가		기타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5	71.43	2	28.57	0	0.00	7
과학기술	37	86.05	4	9.3	2	4.65	43
교육	2	100.00	0	0.00	0	0.00	2
교통 및 물류	3	100.00	0	0.00	0	0.00	3
국방	0	0.00	0	0.00	0	0.00	0
국토개발	6	100.00	0	0.00	0	0.00	6
농림·수산	7	77.78	2	22.22	0	0.00	9
문화체육관광	0	0.00	0	0.00	0	0.00	0
보건	0	0.00	0	0.00	0	0.00	0
사회복지	1	33.33	1	33.33	1	33.33	3
산업·통상·중소기업	3	75.00	1	25.00	0	0.00	4
일반공공행정	6	85.71	1	14.29	0	0.00	7
재정·세재·금융	0	0.00	0	0.00	0	0.00	0
통신	2	66.67	1	33.33	0	0.00	3
통일·외교	4	100.00	0	0.00	0	0.00	4
해양수산	0	0.00	0	0.00	0	0.00	0
환경	1	50.00	1	50	0	0.00	2
기타	3	60.00	0	0.00	2	40.00	5
총합	80		13		5		98
Pr <= P	0.2297						

* 결측 빈도 = 17

〈표 25〉 근무 경력별 분류체계 적절성 비율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총합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빈도	10	2	0	1	
	%	14.71	10.00	0.00	14.29	0.00	0.00	
BRM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	빈도	9	4	1	0	2	2	18
	%	13.24	20.00	20.00	0.00	40.00	40.00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빈도	5	2	1	2	0	1	11
	%	7.35	10.00	20.00	28.57	0.00	20.00	
잘모르겠다	빈도	44	12	3	4	3	2	68
	%	64.71	60.00	60.00	57.14	60.00	40.00	
총합		68	20	5	7	5	5	110
Pr <= P		0.5494						

* 결측 빈도 = 5

〈표 26〉 근무 경력별 정책정보분류체계(BRM) 보완요구사항 비교

구분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세분화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추가		기타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년 미만	52	85.25	6	9.84	3	4.92	61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78.95	3	15.79	1	5.26	19
10년 이상 ~ 15년 미만	3	75.00	1	25.00	0	0.00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4	66.67	2	33.33	0	0.00	6
20년 이상 ~ 25년 미만	4	80.00	1	20.00	0	0.00	5
25년 이상	2	66.67	0	0.00	1	33.33	3
총합	80		13		5		98
Pr <= P	0.4078						

* 결측 빈도 = 17

〈표 27〉 담당업무별 BRM 보완요구사항 비교

구분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세분화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추가		기타		총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개발	6	75.00	2	25.00	0	0.00	8
정책분석	9	81.82	1	9.09	1	9.09	11
정책평가	1	100.00	0	0.00	0	0.00	1
현황분석 및 평가	10	76.92	3	23.08	0	0.00	13
통계연구(통계분석)	4	80.00	0	0.00	1	20.00	5
출판, 홍보	1	100.00	0	0.00	0	0.00	1
담당분야 사업운영	3	100.00	0	0.00	0	0.00	3
정책연구	27	79.41	5	14.71	2	5.88	34
정책입안지원	1	50.00	0	0.00	1	50.00	2
정책정보수집 및 관리	5	83.33	1	16.67	0	0.00	6
기타	11	91.67	1	8.33	0	0.00	12
총합	78		13		5		96
Pr <= P	0.7913						

* 결측 빈도 = 19

계(BRM)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을 비교하였으며, 각 분야 업무 담당자 전체가 정책분야나 정책영역의 추가보다는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7. 경험적 검증을 통한 최종 확정

7.1 정책정보자료의 실험적 구축

실제로 정책정보자료를 수집해 보았을 때 해

당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는 충분히 수집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점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3단계를 기준으로 총 133개의 주제분야에 대해 주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6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자료의 유형 또한 여러 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각각의 자원 유형에 대한 메타필드 설계를 하였다. 자원유형은 일반도서, 주요저널, 주요아티클, 사전과 백과사전, 편람, 보고서, 회의 및 세미나자료, 국제기구, 국제기구자료, 정부기관, 정부간행물관리기관, 외국정부간행물, 통계자료, 국내 법령자료, 해외법령자료, 웹DB, 유관기관, 관련 학회 등이다.

연구진은 133개 주제, 19개의 자원유형, 5~10개에 해당하는 각 자원 유형별 메타필드들을 기준으로 주제별 가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제분류와 관련하여 발견한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영화'는 '문화컨텐츠산업'과 '예술'의 하위분류로 동일하게 존재한다. 정확한 자료이용과 검색을 위하여 '문화컨텐츠산업' 하위 '영상·영화'의 명칭을 '영상 산업' 또는 '영화 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극'이라는 주제 내에 어떠한 세부 주제가 해당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ex. 연극이란 무대, 극장 등에서 이뤄지는 무대예술들의 총칭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가부키 등이 있다). 따라서 개요부분에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

셋째, '국세·지방세' 주제가 존재한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

체와 안정행정부소관이기 때문에 '국세·지방세'를 각각의 주제로 분리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수산·어촌'의 하위주제인 '해양'에 대한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양'이라는 주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에는 수산물, 해양경찰, 해양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양자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현재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서비스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축되는 자료의 건수가 너무나 많거나 적은 사례가 있긴 하나 건수가 적은 경우 장기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충분해질 수 있고, 건수가 너무 많은 주제분야의 경우 두세 개의 주제로 세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2 정책정보 분류체계 확정제안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류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정책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의 국내외 사례분석결과, 분류전문가와의 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사례분석이나 분류전문가와 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과정, 실험데이터 구축을 통한 경험적 검증 과정을 거쳐 초기에 개발된 분류체계를 검증하였으나 <표 28>과 같이 초기에 개발되었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이 BRM 분류체계 3단계가 적합하다

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도서관 '정책분야별주제가이드'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이다. 세종도서관 정보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정책 입안과 실행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직원과 정책 기획과 평가를 지원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 정책정보서비스에 비해 세분화 된 주제로의 가이드 구축이 이용자에게 차별성을 가진 전문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정부 업무에 맞는 정책정보의 주제 식별성을 고려하였다. '정책분야별 가이드'를 이용하는 부처 내 담당자나 연구자의 업무는 비교적 고유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별 주제 식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단계 보다는 명확한 주제 식별이 가능한 3단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도서관의 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과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서비스 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에 대해 정책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세분화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로 한다면 가이드 구축을 1단계~4단계 분류 중 몇 단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3단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면담결과에서 나왔듯이 생생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OECD Themes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험적 검증에서 밝혀졌듯이 '영상·영화'는 '영상산업'으로, 해양수산 아래의 '해양은' '해양자원'으로 3단계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정책정보 서비스 분류체계로 최종적으로 제안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

1단계	2단계	3단계	코드명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경찰행정	SC001
		과학수사	SC002
	법무 및 검찰	법무 및 검찰	SC003
		교정행정	SC004
	안전관리	안전관리	SC005
		소방·방재	SC006
	해양경찰	해양경찰	SC007
과학기술	과학기술 진흥·연구	과학기술 진흥·연구	SC008
		과학연구단지	SC009
		우주개발	SC010
	기상기후	기상기후	SC011
	원자력기술	원자력기술	SC012

1단계	2단계	3단계	코드명
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SC013
	교육 일반	교육 행정	SC0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유아교육	SC015
		초등교육	SC016
		중등교육	SC017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SC018
	특수교육	특수교육	SC019
교통 및 물류	국토교통	국토교통	SC020
	육상교통	도로	SC021
		철도	SC022
	항공·공항	항공·공항	SC023
	해운·항만	해운·항만	SC024
	물류	물류	SC025
국방	국방	국방	SC026
		대외군사관계	SC027
	병무	병무	SC028
국토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SC029
		새만금	SC030
		행복도시	SC031
	부동산	토지개발	SC032
		주택	SC033
	수자원	댐·치수	SC034
		하천	SC035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 정책	SC036	
농림·축산	농업·농촌	농업·농촌	SC037
		친환경 농업	SC038
	축산	축산	SC039
	임업·산촌	임업	SC040
		산림	SC041
	식량·식품	식량 정책	SC042
식품		SC043	
문화체육관광	종교	종교	SC044
	관광	관광	SC045
		사행산업	SC046
	문화	문화 정책	SC047
		국어정책	SC048
		박물관	SC049
		도서관	SC050
		지역문화	SC051

1단계	2단계	3단계	코드명
문화체육관광	문화컨텐츠산업	광고	SC052
		방송	SC053
		영상산업	SC054
		게임	SC055
		대중문화	SC056
		저작권	SC057
		출판·인쇄	SC058
	예술	예술 정책	SC059
		음악	SC060
		연극	SC061
		영상·영화	SC062
		무용	SC063
		미술	SC064
		전통예술	SC065
	문화재	문화재	SC066
	체 육	체육진흥	SC067
		국제체육	SC068
		장애인체육	SC069
	국정홍보	국정홍보	SC070
	건강보험	건강보험	SC071
	보건의료	보건의료	SC072
		공공보건	SC073
		질병관리	SC074
	보건산업	보건산업	SC075
		생명과학진흥	SC076
	식품의약품안전	식품안전	SC077
		의약품안전	SC078
	사회복지	고용노동	고용노동
근로복지			SC080
산재예방			SC081
직업능력개발			SC082
공적연금		공적연금	SC083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SC084
국가보훈		국가보훈	SC085
취약계층지원		노인 복지	SC086
		아동·청소년 복지	SC087
		다문화·이주민 복지	SC088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SC089
여성 복지		여성 복지	SC090
		보육	SC091

1단계	2단계	3단계	코드명
산업·통상·중소기업	공정거래	공정거래	SC092
	무역 및 투자유치	무역 및 투자유치	SC093
		통상	SC094
		외환·환율	SC095
	산업진흥	산업기술표준	SC096
		특허	SC097
		지식·산업재산권	SC098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	SC099
	에너지 및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SC100
		광물자원	SC101
일반공공행정	국가통계	국가통계	SC102
	국민권익·인권	국민권익·인권	SC103
	국정운영	전자정부	SC104
		규제개혁	SC105
		감사	SC106
		공공기록물관리	SC107
		정부조직·청사관리	SC108
		공무원 인사·교육	SC109
		정부조달	SC110
	정부자원관리	공공데이터	SC111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행정
	지방재정		SC113
	재정·세제·금융	금융	금융
기획재정		기획재정	SC115
세제		국세	SC116
		지방세	
		관세	SC117
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SC118
		IT	SC119
	우정	우정	SC120
통일·외교	외교	외교	SC121
	통일	통일	SC122
		남북교류	SC123
해양수산	해양수산·어촌	해양자원	SC124
		수산업	SC125
환경	환경보호	대기환경	SC126
		지구온난화	SC127
		상하수도	SC128
		지하수	SC129
		자연환경	SC130
		해양환경	SC131
		토양·토질	SC132
	폐기물 관리	폐기물	SC133
17개	66개	133개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류체계가 적절한지 파악하고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 분류전문가와와의 토론, 면담,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정책정보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기능분류체계(BRM)가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류체계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첫째, BRM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았고, 잘 모른다는 비율이 81.8%나 되었다. 평균은 1.8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RM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에서, 그렇다는 17.4%, 그렇지 않다는 10.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61.7%로 나타났다.

셋째, BRM과 도서관 분류체계 중 정책정보서비스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BRM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비율이 15.7%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분류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자료서비스 제공시 분류체계로 BRM 선택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두 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정부기능 기반 분류체계인 BRM이 도서관분류체계나 다

른 분류체계보다 익숙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17.4%로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정책정보자료를 찾는데 다른 분류체계보다 용이한지에 대해 동의한다가 33.9%로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7.8%로 나타났다.

다섯째, BRM으로 정책정보분류시 보완점에 대한 조사에서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세분화가 69.6%로 나타났고,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 추가가 11.3%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책정보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BRM 분류체계가 정책정보서비스에 대체적으로 적합하지만, 분류의 추가가 필요하며, 통일·외교 아래 개발원조(ODA) 추가, 법 정책, 법률정보도 별도로 국내외로 분류하여 연계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도서관의 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보다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서비스 하는 것 중 더 효율적일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세분화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주제별 가이드 서비스를 한다면 1단계~4단계 분류 중 몇 단계까지 구축 할 것인가에 대해 3단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전문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면서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수행된 것이며, 그 중에서 웹상에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구조로 분류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 사이트의 분류구조가 각각 상이한 분류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담, 설문, 경험적 검증, 심층논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기반으로

로 수정·보완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면담결과에서 나왔듯이 생산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수집되는 정보자료들을 기반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택기. 2010. 『2010년 국감질의자료』. [online] [cited 2014. 5. 2.]
 <http://visionk.or.kr/attachment/cfile9.uf@1249DA4C4F_FE5A812B1B98.PDF>
- [2] 강신택. 1978. 『정책학개론』. 서울: 법문사.
- [3] 광승진, 이응봉, 장덕현, 배경재, 김정택. 2011.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11-330.
- [4] 김동욱. 1995.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 『국가기간전산망지널』, 2(4): 49-61.
- [5] 김주미. 2008.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IT서비스학회지』, 7(4): 61-86.
- [6] 박용부, 김태수. 2011.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28(3): 83-101.
- [7] 설문원. 2013.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
- [8] 신신애. 2005. EA(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 표준화 추진방안 『정보과학회지』, 23(12): 63-69.
- [9] 양순애. 2007. 전자정부사업 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능분류체계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2): 89-120.
- [10] 이대영. 1984. 『정책학개론』. 서울: 고시계사.
- [11] 이명희. 2013.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39-160.
- [12]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사안 파일(Case file)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 [13] 정보통신부. 2006. 『법정부 기술참조모형 1.0』. [서울]: 정보통신부.
- [14] 최봉기. 1981. 정책정보의 기능과 가치평가. 『한국행정학보』, 15: 157-172.
- [15] 최재황. 2009.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 협력망 구축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1): 97-114.
- [16] 행정안전부. 2008.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 [서울]: 행정안전부.
- [17] 홍현진, 노영희. 2007.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

양도서관

- [18] 홍현진, 노영희. 2008.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95-125.
- [19] Alberts, Inge et al. 2010. Bringing together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Business Process Analysis: Growing Trends in Records Management. Cogniva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 [20] Foscarini, Fiorella. 2009. *Function-Based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An Exploratory Study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In Central Banks*, Ph.D. dis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21] Hernon, P. and McClure, C. R. 1988. "GPO Depository Programs: Building ofr the Future." *Library Journal*, 113: 51-60.
- [22] Janowski, T., Pardo, T. A. and Davies, J. 2012. "Government Information Networks- Mapping Electronic Governance cases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concept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9: S1-S10.
- [23] Joseph, P., Debowski, S. and Goldschmidt, P. 2012. "Paradigm shifts in recordkeeping responsibilities: implications for ISO 15489's implementa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22(1): 57-75.
- [24] Orr, Stuart A. 2005. *Functions-Based Classification of Records: Is it Functional?* Master's thesis, Northumbria University.
- [25] Rappaport, A. 1975.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Quantitative and Behavioral Dimensions*. 2nd ed. Englewood Cliffs, N. J., London: Prentice-Hall.
- [26]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7] Smyth, Zoë A. 2005. "Adopting a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Business Process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6(2): 233-24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Taikki. 2010. *2010 Question material for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online] [cited 2014. 5. 2.]. <<http://visionk.or.kr/attachment/cfile9.uf@1249DA4C4F FE5A812B1B98.PDF>>
- [2] Kang, Sintaek. 1978.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Seoul: Bubmoon Books.
- [3] Kwak, Seungiin, Lee, Eungbong, Chang, Durkhyun, Bae, Kyungjae and Kim, Jeongtaek.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National Library for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11-330.

- [4] Kim, Donguk. 1995. "Public Sector ICT for Joint Use of Policy Information." *Journal of Computer Network State Period*, 2(4): 49-61.
- [5] Kim, Joomi. 2008.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 SMEs Policy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7(4): 61-86.
- [6] Park, Yongboo and Kim, Taesoo. 2011. "A Study on the Model for Construction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83-101.
- [7] Seol, Moonwon. 2013.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Framework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to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s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3-51.
- [8] Shin, Shinae. 2005. "EA (Enterprise Architecture) based standardization approach."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23(12): 63-69.
- [9] Yang, Soonae. 2007. "Analysis for e-Government Business and Forward Direc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in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0(2): 89-120.
- [10] Lee, Daeyoung. 1984.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Seoul: Gosi-law.
- [11] Lee, Myeonghee. 2013. "A study of Promotion of Public Policy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39-160.
- [12] Lee, Hyunju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for Criminal Case Fi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169-197.
- [13]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06. *Government-wide Technical Reference Model 1.0*. Seoul: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14] Choi, Bongki. 1981. "Evaluation on Functions and Values of Policy Inform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5: 157-172.
- [15] Choi, JaeHwang. 2009. "A Study on Cooperative Library Network Program for Government's Policy Information Portal at National Digital Library in Korea."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2(1): 97-114.
- [1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8. *Operational Procedure For Business Reference Model (BRM)*.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17] Hong, Hyunjin and Noh, Younghee. 2007. *A Study on Operations and Development Pla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18] Hong, Hyunjin and Noh, Younghee. 2008. "A Study on Modeling a Unifi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95-125.